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6년 8~9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생계위기 취약계층 돕는 ‘그냥드림’ 이용은 편리하게, 문턱은 더 낮춘다

- 8월부터 최소 운영시간 확대(주 2회→주 3회)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 사회서비스정책관, 연일 이어지는 폭염 대응 ‘그냥드림’ 현장방문 -

-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가구를 돕는 ‘그냥드림’ 사업의 운영시간을 최소 주 3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활성화하여 거동 불편자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한다.
-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168개 시군구, 305개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8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장의 최소 운영시간을 기존 ‘주 2회, 일 3시간 이상’에서 ‘주 3회, 일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 또한,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가 각 지역의 자원과 여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복지 문턱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그냥드림’ 사업장을 설치하는 등 기반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8월 5일(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 1호점’을 방문하여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그냥드림’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이 많이 방문하는 ‘그냥드림’ 사업장의 현장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냥드림 방문 이용자 등에게 얼음물을 제공하는 등 무더위 대응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챙겼다.
-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마포구 관계자 및 전국·광역 기부식품 자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업 내실화 및 온열질환 예방대책(얼음물 제공 등)을 논의했다.
-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무더위 속에서도 위기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위기에 처한 국민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479. 사회서비스지원과. 2026. 8. 5.

II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 전국에 AI 진료지원 도구 보급한다

- 8.6. 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본의료 전략」 심의·의결 -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메우는 의료 AI 활용·지원 본격화, 3대 전략·12대 과제 -
- 하반기 응급·공공의료 AX 시범사업, '27년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착수 -
- 동네 보건소부터 응급실·공공병원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AI -

■ 정부는 8월 6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하였다. 이번 전략은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하였다.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 의료 공백* 및 지역 간 의료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 발표를 기점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AI) 활용과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 공중보건의 미배치 읍·면 보건지소: ('25) 730개(59.5%) → ('27 전망) 1,083개(86.9%)

■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응급 이송 AX*,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7년에는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등에 착수해 국민이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을 체감하고 전국 어디서나 첨단 AI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AX(AI 전환, AI Transformation): AI를 통해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근본적으로 전환

** 소버린(Sovereign) AI: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데이터·AI 기술로 개발·운영

1.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우리 동네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

■ 앞으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AI의 도움을 받는 꼼꼼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

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패키지)를 도입해 엑스레이 등 영상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로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먼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I가 지키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 구급차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으로 지원하는 '(가칭)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대구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병원별 진료역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기 이송을 돕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환자 분류·모니터링 등 응급실 내 의료진의 판단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 응급실'도 개발한다.

【내 건강기록과 함께하는 진료】

-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마련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CD)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검진 결과를 AI가 일상 언어로 해석하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 등을 제공하여 질병 예방과 개인별 건강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 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AI로 앞당기는 신약 개발과 첨단 치료】

- 치료제가 마땅치 않던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열린다. 고성능 AI 분석을 바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술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유전체·세포 등 기초 바이오 데이터를 고성능 AI가 분석하는 통합 플랫폼(K-허깅페이스*)과 기업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 국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혁신 신약 플랫폼 등 'K-AI 신약 플랫폼'을 구축한다.

* 허깅페이스(Hugging face): AI 모델, 학습 데이터셋,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는 글로벌 AI 공유 활용 플랫폼

- 아울러 12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 우선 개방*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신약·의료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26. 하) 12만 명 규모로 개방 → ('29년) 70만 명 이상 → ('32년) 100만 명 이상

2.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로 누리도록 AX 기반 구축

【전국 공공병원 AI 대전환,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 앞으로는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상 첨단 AI 도입이 어려웠던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국가 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9개소 시범 개통을 시작으로 '27년 30개소, '29년에는 72개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교체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AI 기반 첨단의료 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방문부터 귀가까지, AI가 함께하는 병원】

-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를 AI로 지원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AX 선도모형을 구현하는 권역별 'AI 특화병원'을 구축·확산한다. 진료·간호·수술·원무 등 병원 서비스 전반이 AI 기반으로 재설계되어 접수부터 퇴원까지 병원 이용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흩어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 한국형 의료AI 개발】

-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거점(허브)’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에 기반한 ‘한국형 의료 AI’를 ’27년부터 본격 개발해 지역 공공병원 중심으로 활용한다. 외국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AI 기술로 한국인에게 맞는 의료 특화 AI를 만들 계획이다.
-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데이터 이용 제한, 유출 방지,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AI 시대에 맞게 가명정보 규제는 합리화한다.

3.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생태계 마련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 의료 AI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AI 도입에 따른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개별 AI 의료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과 함께, AI 기술의 의료성공을 평가·보상하는 체계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병원과 의료진이 안심하고 AI를 도입하면, 그 혜택은 더 나은 진료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역과 함께 크는 AI·바이오헬스】

-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지역병원의 연구 역량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지역 AX 거점도 조성한다. 지역병원이 AI 의료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의료 AI 활용 기반 마련】

- 국민이 안심하고 AI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AI 윤리 지침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데이터 민감성과 민간 클라우드 활용 수요를 고려한 ‘(가칭)보건의료 보안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한 AI 인재 양성·유치】

- 의료 AI 혁신을 이끌 사람에도 투자한다. AI·바이오헬스 분야의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국내 우수 AI 의료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AI 기본의료 모델’ 기반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AI 기본의료 모델’을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한다.
- '26.10월 개최 예정인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가칭)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K-의료 AI 기업·병원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全)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WHO-국제병원연맹(IHF) 연계('26.10.21.~22.)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라며 서,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 의결을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국민의 삶

구 분	의료현실	문제 원인	AI 기본의료 전략	달라지는 미래
환자 중심 AI 진료 (소비자)	① 병원 이동 시, 환자는 영상 CD 복사	▶ 병원 간 환자 진료정보 공유가 어려운 現 체계	▶ 개인 건강기록(PHR) 중심 병원 간 의료영상 공유	병원을 옮길 때, 내 건강 기록도 따라오고
	② 진료기록만으로 건강상태 이해 한계	▶ 어려운 의학용어로 작성된 진료기록	▶ 어려운 의학 용어를 AI가 알기 쉽게 설명 (국민 AI 건강비서)	+ 환자 중심 AI 진료 통한 끊임없는 의료서비스
AI 기반 의료현장 업무혁신 (공급자)	③ 필수의료진 부족으로 업무 부담 가중	▶ 단순 행정업무로 인해 의료진 업무 부담 가중	▶ 진료 및 행정보조 AI 솔루션 도입 확산	AI가 진료/검진을 보조,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
	④ 응급 상황에서 개별 병원에 전화 문의	▶ 구급대-병원을 연계하는, 실시간 플랫폼 부재	▶ 응급 AI 플랫폼이 실시간 이송 정보 분석, 적정 병원 탐색·추천	+ 실시간으로 적정 병원을 찾아, 적기 이송

구분	의료현실	문제 원인	AI 기본의료 전략	달라지는 미래
지역 필수 공공 의료	⑤ 의료진이 부족한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관리 공백	▶ 지역 의료진 부족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 공급 한계	▶ 진료역량을 강화하도록 의료 AI 패키지 보급 ▶ AI 기반 비대면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취약지 거주 주민에게 AI 기반 의료/건강관리
	⑥ 멀리 있는 수도권 병원 쓸림	▶ 지역 의료격차 심화 ▶ 노후화된 지역 공공병원	▶ 전국 공공병원을 잇는 첨단 AI 고속도로 구축 ▶ 지역 공공병원 전산시스템 교체	우리 지역 공공병원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 첨단 AI 의료서비스 제공
데이터 활용 + 소버린 AI 개발	⑦ 파편화 된 데이터로 활용 가치 저하	▶ 개별 기관별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 원스톱 데이터 통합 컨설팅 지원 ▶ 국가보건의료데이터 허브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는 높이고, + 한국인에게 맞는 소버린 의료 AI 개발
	⑧ 외국 의료 AI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맞는 서비스 한계.	▶ 한국형 의료 AI 부재	▶ 국내 보건의료데이터와 독자 AI 기술 기반 소버린 의료 AI 개발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484.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2026. 8. 6.

III

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 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

-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수립·발표 -
- 적극적인 분리보호 활성화 및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
-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 1차 조사(약 3만 명) 완료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했던 점, ▲아동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 등이 주요 문제로 분석되었다.

- 이에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인프라) 확충,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지방정부·경찰의 분리보호 현장 판단 미흡 ■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지방정부에 추후 통보 등 전담하여 진행 결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필요	■ 신고 내용 신속 통보·공유 등 분리보호 판단 위한 지침, 법령 등 관련 규정 정비 ■ 연 2회 이상 재신고 시 즉각분리 최우선 고려 ■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현행 제도상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의 일시보호조치,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하나, 분리보호하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우선 경찰이 전담하여 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하였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향후 개정된 업무 매뉴얼* 내용 등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등 아동학대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짧은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할 계획이다.

*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 ▲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 「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매뉴얼」(경찰)

- 또한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2. 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학대피해 장애아동·영유아 대상 분리보호 시설 부족 (피해장애아동쉼터 12개소)	■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분리보호 시설 확충 (+특화학대피해아동쉼터 18개소)
■ 시·군·구 내 시설 부족 시 시·도 연계 역할 부족	■ 시·군·구 내 시설 부족 시 시·도 연계 역할 강화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리모델링)하여 2027년까지 18개소를 조성한다.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에 비해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관련 시설(바닥 및 벽면 안전매트, 유아용 기자재 등)을 갖추게 된다.

- 또한 시·도 공무원이 관할 시·도 내 피해아동 보호시설 연계를 수행하도록 하여 시·도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3.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 공유 미흡 ■ 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	■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 신속 공유, 협업 강화 ■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피해아동 등 관리 상황 신속 공유

■ 현행 법령상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장기 결석 아동의 정보는 이미 공유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 이력,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적기에 공유되지 않아 위기아동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교육청에서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시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 재학대 예방 강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수단 미흡 ■ 학대 판단 시 보호자 대상 아동수당 지급 변경 관련 고지·안내 부재	⇒	■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 등 합동방문 대상으로 확대 ■ 학대 판단 후 보호자에게 재학대 발생 시 지급 대상 변경 가능성 고지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시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 이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똑똑!’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인력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5.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한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지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6. 위기아동 조기발견 지속 추진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0,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26.5.4.~7.24.)하였고,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체납 등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

- 1차 조사 시 30,855명을 조사하였고,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99명 중 195명의 소재가 확인되었으나 그 중 아동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4명은 소재 확인 중이다. 2차 조사는 약 3만 명에 대하여 7월 13일부터 실시하여 9월 30일 완료될 예정이다.

-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543. 아동학대대응과. 2026. 9. 2.

IV

‘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 국가가 답한다…발달장애인 돌봄 자립 지원 강화

- 관계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발표 -
- 주간·방과후활동 등 돌봄서비스 확대, 최종증 돌봄과 자립 기반 구축 -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25년 말)이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이번 추진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돌봄이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❶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❷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❸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하여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❶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1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80개소)로 확대한다.
-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6천 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1,5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 ('26) 2,340명 → ('27 정부안) 2,760명

**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 : ('26) 27개소 → ('27 정부안) 5개소

〈달라지는 점①〉 대기하던 서비스,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이용

- 성인 발달장애인 A씨는 그동안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많아 오랜 기간 기다려야 했다. 어렵게 이용기관을 찾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매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지역 내 제공기관도 늘어나면서, A씨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낮 시간 동안 또래와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A씨의 부모 역시 돌봄 걱정을 덜고 경제활동을 이어가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②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품질평가 체계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을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320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2026년 1만 1,700명에서 2027년 1만 2,200명(+5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개발 및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부모가 더 이상 곁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사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조건부 기

소유에 활성화도 추진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장애인스포츠포스트강좌이용권 등을 통해 문화·체육생활의 참여 기회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점②〉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가 지낼 곳이 있다

- ☐ 심한 자·타해 등 도전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B씨는 다른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모든 돌봄을 해왔던 상태였다. B씨는 다행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내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면 아이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라는 걱정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 ☐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B씨 가족은 부모가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데 한시름을 놓게 됐다.

③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공적 지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APP)을 구축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질 높은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하여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지속 검토한다.
- 마지막으로,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대상을 2026년 1.6만 명에서 2027년 1.8만 명(+2천 명)으로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점③〉 처음 장애를 마주한 부모도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 ☐ 어린 자녀의 발달이 또래보다 늦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병원에 가야 하는지, 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 교육지원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 인터넷과 주변 지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야 했다.
-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복지·교육·의료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C씨는 센터 한 곳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안내받고 관련 기관과 서비스까지 바로 연계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자가 각각의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알아보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 정부는 이번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정은경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은경 장관은 추진방안 발표 이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에 방문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573. 장애인서비스과. 2026. 9. 10.